

www.eai.or.kr

EAI 워킹페이퍼

양극화 시대 상충적 유권자의 선택:

정권견제론 vs. 정권안정론

유성진(이화여자대학교)

양극화 시대 상충적 유권자의 선택:

정권견제론 vs. 정권안정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1. 들어가며

통상 대통령 임기 증반에 진행되는 의회선거는 통상 집권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22대 총선은 결과의 측면에서 이러한 패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직후 54%로 출발하였지만, 임기 3개월 만인 2022년 8월 28%로 저점을 찍은 이후 줄곧 30%대 중, 후반 박스권에 갇힌 채 22대 총선을 맞이하였다.¹ 응답자의 1/3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이 같은 상황은 이번 총선이 애초부터 여당에 불리한 구도로 치러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에 대한 여론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총선 직전 두 시각에 대한 평가는 정권견제론이 약간 우세하거나 팽팽한 균형을 보였다.² 이러한 상황은 현 국정상황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느냐 혹은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에 있느냐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¹ 이러한 수치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전국지표조사(National Barometer Survey)에 근거한 것이다(<http://nbsurvey.kr/>).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역시 유사한 수치를 보여준다.

²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의 결과는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은 각각 47%와 4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3월 마지막 주 한국갤럽의 조사는 정권견제 49%, 정권안정 40%로 정권견제론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정파적 양극화에 영향으로 유권자의 인식에 달리 작용하였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집권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분점정부의 현실에서 유권자의 그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이 지지정당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지지정당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정치심리학의 고전적인 설명방식이다(Campbell *et al.* 1060; Converse 1976; Lewis-Beck *et al.* 2008).

이러한 상황에 이 글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을 구분하고, 각 태도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들의 투표행태를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정파적 양극화의 영향이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선호에 따라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에 차별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이 양분된 분점정부의 현실은 두 시각 모두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유권자들, 즉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존재할 개연성을 안고 있다. 만일 이러한 유권자들이 상당하다면 선거결과는 이들의 선택에 좌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첨예한 정파적 양극화가 초래한 치열한 선거경쟁의 상황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의 선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충적 유권자들의 특성과 이들의 정치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이들이며,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투표행태를 보였는가?

2. 정치적 대상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일차원적 인식 vs. 이차원적 인식

전통적인 선거연구에서 정치적 대상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정치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치적 대상에 대한 선호가 정치행위를 결정한다는 이러한 가정은 인간의 태도를 일차원적/양극적으로 파악하는 ‘태도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e.g. cognitive consistency theory, Festinger 1957)’로부터 연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대상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 혹은 부정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 두 가지 요소는 ‘상쇄적(reciprocal)’인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치적 대상에 대한 호불호는 일차원적으로 연결되며 호의적 태도의 증가는 부정적 태도의 감소를, 반대로 부정적 태도의 증가는 호의적 태도의 감소를 의미한다. 결국 유권자들의 태도는 일차적원/양극적으로 측정되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호불호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물인 정치대상에 대한 상대적 선호 혹은 상대적 비선호가 정치행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해되었다.

인지과학과 정치심리학에서의 새로운 발견들은 유권자 태도에 관한 상쇄적인 해석에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대표적으로 카시오포 등(Cacioppo *et al.* 1997)은 ‘상쇄성’은 호의적/부정적이라는 태도의 두 요소가 표현될 수 있는 조합의 하나에 불과하고 지적한다. 이들은 태도의 두 요소가 때때로 전혀 별개의 사물처럼 분리되어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공존할수도 있음을 주장하며 개인의 태도에 관한 이차원적/양변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유권자들의 태도가 전통적인 일차원적 해석보다 훨씬 복잡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예컨대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다른 경쟁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비선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전통적인 방식의 이해와 달리, 때때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호불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상호 공존할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요소가 상쇄되지 않고 상호 공존하는 상태는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어 개인의 행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Jonas *et al.* 1997; Maio *et al.* 1996). 유권자의 행태에 있어서도 상충적 태도는 정당에 대해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며, 고전적 선거연구 이론에서 제시된 ‘교차압력(cross-pressures)’과 ‘태도충돌(attitude conflict)’과 유사하게 의사결정에 심리적 고충을 유발하여 개인의 정치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Basinger and Lavine 2005; Cacioppo *et al.* 1997; Hochschild 1981, 1993; Lavine 2001; McGraw *et al.* 2003; Yoo 2010).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의 대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정권견제론에 대한 선호가 즉각적인 정권안정론의 반대를 의미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때때로 양자 모두에 대해 좋고 싫음의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특히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각기 다른 정당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이번 총선과 같은 선거환경은 유권자들이 양자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견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태도에 관한 이차원적/양변적 논의를 적용하면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권자들은 <그림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그림 1> 정권견제론/안정론 태도로 본 유권자 구분

		(정권안정론)	
		반대	동의
(정권견제론)	반대	상충	일방
	동의	일방	상충

<그림 1>에서 정권견제론에 동의하고 정권안정론에 반대하거나 그 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일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이다. 반면,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둘 다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은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이다. 전통적인 태도연구의 논의에서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호의적 그리고 부정적 요소는 상쇄적이므로 유권자들은 대부분 일방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극히 일부에서 두 요소가 완전히 상쇄되는 중립적 태도가 발견될 뿐이다.³ 그러나 이차원적 태도의 논의에서는 호의적 그리고 부정적 요소가 상쇄되지 않고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충적 태도는 이들의 정치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³ 정파적 양극화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선거 직후 조사된 유권자 인식조사는 이번 총선에서 태도에 관한 이차원적인 논의가 실제 상황과 보다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다.⁴ <표 1>은 정권견제론과 안정론 두 관점 각각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응답자를 구분한 결과이다.⁵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응답자의 다수가 일방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두 관점 중 하나에 찬성하고 다른 하나에 반대하는 일방적 태도의 응답자들은 979명으로 이는 전체 응답자의 6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나의 관점에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가지지만 다른 관점에 중립적인 응답자들(준일방)은 모두 22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에 따르면 호의적 또는 부정적인 요소는 상쇄되므로, <표 1>에서 준일방적 태도의 응답자들로 구분된 이들은 결국 일방적인 태도의 응답자들이 되므로 이 둘을 하나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거의 80%에 달하는 이들이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중 하나에 선호를 갖고 있는 일방적인 태도의 유권자로 구분될 수 있다. 정파적 양극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현재 선거환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표 1>이 보여주는 또다른 중요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15%가량이 상충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견제론과 안정론 모두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모두 23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두 관점 모두에 반대하는 응답자(154명)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태도에 관한 이차원적 논의와 같이 우리의 유권자 중 상당한 비율이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

⁴ 이 글의 분석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선거후 유권자인식조사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4월12일부터 16일까지 한국리서치 정치사회 패널(49,889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의 형태로 수행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수는 1,528명이다.

⁵ 선거직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번 총선의 두 가지 관점 즉,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안정론),” 그리고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견제론)”에 대해 각각 동의여부를 답변하였다. 각 태도는 7점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7점(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고, 그 응답에 따라 모두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일방”적 태도의 유권자는 정권안정론에 동의(5~7점)하면서 정권견제론에 반대(1~3점)하거나, 그 반대의 태도를 보인 이들이며,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는 두 입장 모두에 동의(5~7점) 혹은 반대(1~3)하는 이들이다. 하나의 입장에 중립(4점)이면서 다른 하나의 입장에 동의 혹은 반대하는 이들은 “준일방”적 유권자로, 두 입장 모두에 중립적인 태도(4점)을 보인 이들은 “중립”적인 유권자로 구분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선거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존재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거결과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림 2>는 보다 손쉬운 비교를 위해 표의 결과를 비율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⁶

<표 1> 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한 태도와 응답자 구분

		정권안정론		
		반대	중립	동의
정권견제론	반대	상충(154)	준일방(39)	일방(395)
	중립	준일방(97)	중립(87)	준일방(64)
	동의	일방(584)	준일방(154)	상충(81)

괄호 안은 각 항목의 사례 수.

<그림 2> 정권견제/안정론 태도로 본 응답자 분포

3. 상충적 유권자들은 어떤 이들인가?

앞에서 서술된 것처럼 선거 직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압도적인 부정적인 평가와 달리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 현실에 대한 당파적으로 차별적인 인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만일 그렇다면 당파성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에 대해 일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파성에 따라 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⁶ 두 관점 모두에 중립적인 입장(4점)을 갖고 있는 중립적 태도의 응답자들은 모두 87명으로 전체의 5.4%이다.

〈표 2〉 당파성과 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한 태도

	지지정당					전체
	더민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기타	무당파	
중립적	2.8 (14)	5.8 (30)	3.3 (4)	7.5 (12)	11.7 (22)	(82)
상충적	10.3 (52)	10.6 (55)	8.3 (10)	27.0 (43)	34.0 (64)	(224)
준일방적	12.7 (64)	12.4 (64)	6.6 (8)	20.1 (32)	25.0 (47)	(215)
일방적	74.2 (374)	71.2 (368)	81.8 (99)	45.3 (72)	29.3 (55)	(968)
전체	(504)	(517)	(121)	(159)	(188)	(1489)

수치는 각 열의 비율, 괄호 안은 사례 수. $\chi^2=187.570$ ($p < .01$)

표의 결과는 당파성과 일방적 태도가 실제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70퍼센트 정도는 정권견제론과 안정론 중 하나에 경도되어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상충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의 비율이 10퍼센트에 달했고 이는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도 당파성이 유권자 태도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은 두 대정당의 지지자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반면, 그 외의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과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의 30퍼센트 정도가 상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결국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제3정당과 무당파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양대 정당의 지지자들에서도 발견되었다. 극심한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도 상충적 태도가 당파성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상충적 태도가 당파성과 독립적으로 모든 유권자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만 상충적 태도의 비율이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과 무당파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들이 양대 정당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들이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에 대해 상충적 태도를 갖고 있는가? <표 3>은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에 대한 태도로 구분된 네 개의 집단이 인구사회학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정리한 결과이다. 상충적 유권자와 일방적 유권자 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 보면, 전자는 후자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젊은 집단이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연령을 제외하고는 두 집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⁷

<표 3> 상충적 유권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권견제/안정론	성별		평균연령	거주지역	
	남성	여성		수도권	비수도권
중립적	56.3 (49)	43.7 (38)	42	47.1 (41)	52.9 (46)
상충적	51.1 (120)	48.9 (115)	47	48.9 (115)	51.1 (120)
준일방적	52.0 (118)	48.0 (109)	45	49.6 (113)	50.4 (114)
일방적	47.9 (468)	52.1 (511)	54	51.7 (506)	48.3 (473)
전 체	49.4 (755)	50.6 (773)	51	50.7 (775)	49.3 (753)

수치는 각 항목의 비율, 괄호 안은 사례 수.

그렇다면 정치적 특성에 있어서 두 집단은 어떠한가? <표 4>는 상충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와 일방적 태도의 응답자를 지지정당과 이념성향, 그리고 정치지식의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이다.⁸

⁷ 집단 간 차이는 연령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연령: $F=38.659(p < .01)$, 성별: $\chi^2=3.469(p = .325)$, 거주지역: $\chi^2=15.790(p = .201)$).

⁸ 이념성향은 “0점(매우 진보)~10점(매우 보수)”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정치지식은 2024년 국가 예산 규모,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 투표 연령, 국무총리의 이름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변한 개수로 측정하였다.

지지정당의 측면에서 두 집단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일방적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했지만, 상층적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가 50%에 미치지 못하며 절반이 넘는 비율이 제3정당 지지(23.7%)와 무당파(28.6%)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층적 유권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전체 응답자들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 상층적 유권자의 정치적 특성

	지지정당				이념성향 (평균)	정치지식 (평균)
	더민주	국민의힘	제3정당	무당파		
상층적	23.2 (52)	24.6 (55)	23.7 (53)	28.6 (64)	5.16	1.90
일방적	38.6 (374)	38.0 (368)	17.6 (171)	5.7 (55)	4.81	2.41
전 체	33.8 (504)	34.7 (517)	18.8 (280)	12.6 (188)	4.95	2.19

수치는 각 항목의 비율, 괄호 안은 사례 수.

두 태도의 응답자들은 이념성향과 정치지식의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볼 때 상층적 태도의 응답자들은 일방적 태도를 가진 이들에 비해 약간 더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전체 응답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F=3.941, p<.01$). 이번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진행되어 정권평가의 구도가 작동하였음을 감안할 때,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이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에 대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갖기 어려웠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치지식의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보인 집단은 일방적 태도의 응답자들이었다.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전체 응답자 평균에 대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정치에의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임을 의미한다($F=38.394, p < .01$).⁹

⁹ 이러한 양상은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치에 별로 혹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에 대해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과 일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표 5>는 두 집단을 정치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호감도의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이다.¹⁰ 우선 전체 응답자의 평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유권자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과 정치인의 호감도 역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3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는 10점 만점에 4.67점으로 대통령보다는 높았지만 부정적인 평가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 응답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평균 43.24점, 국민의힘이 35.37점을 얻어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는 평균 27.50점과 33.27점으로 이보다 더욱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글의 관심대상인 상충적 태도의 응답자들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이들로 나타났다. 이는 상충적 유권자들이 정치행위자와 정당 등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반면, 일방적 태도의 응답자들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보다 부정적이었지만 국회의원 평가와 정당과 정치인 호감도에 있어서는 전체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일방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의 입장에서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을 바라보고 있기에 호불호의 정도가 상호 상쇄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방적 태도의 응답자들에게서도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¹

상충적 태도의 응답자들 중에서는 25% 정도였던 반면, 일방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에게서는 12% 정도에 그쳤다.

¹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0점(매우 못한다)~10점(매우 잘한다)”, 국회의원 평가는 지역구 의원의 지난 4년간 국회활동에 대해 “0점(매우 잘못했다)~10점(매우 잘했다)”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당과 정치인의 호감도는 “0점(대단히 부정적)~100점(대단히 호의적)”의 온도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¹¹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는 국회의원 평가와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태도의 집단 간 차이에 관한 통계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평가: $F=2.916(p < .05)$, 국회의원 평가: $F=.684(p = .562)$,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F=8.538(p < .01)$, 국민의힘 호감도: $F=2.248(p = .081)$, 윤석열 호감도: $F=4.906(p < .01)$, 이재명 호감도: $F=20.078(p < .01)$.

〈표 5〉 상층적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대통령 평가	국회의원 평가	정당 호감도		정치인 호감도	
			더민주	국민의힘	윤석열	이재명
상층적	3.03	4.46	35.26	32.10	20.66	23.16
일방적	3.11	4.68	45.54	35.37	28.95	37.88
전 체	3.18	4.67	43.24	35.55	27.50	33.27

수치는 각 항목의 평균.

4. 상층적 유권자의 투표선택

그렇다면 상층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어떠한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호감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가진 유권자들이다. 이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층적 유권자들을 투표에 불참하는 상황으로 이끈다면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 6〉에 정리된 결과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절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했음을 보여준다.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이들의 기권율은 20%를 상회한다. 물론 이는 일방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의 기권율의 세 배에 달하며, 전체 응답자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¹² 그러나 상층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에게서도 투표율은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의 절대다수가 인식의 상층성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미이다.

¹² 투표여부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chi^2=63.299$ ($p < .01$))

물론 투표 결정 시기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식의 상충성이 이들에게 투표 참여 결정에 있어서 심리적 고충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다. 일방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선거 1개월 전에 이미 후보나 정당을 결정했음에 반해, 상충적 태도의 응답자 중 그러한 이들은 3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였고 거의 4명 중 한 명이 투표 당일에서야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진다.¹³ 일방적 태도의 응답자 그리고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서 상충적 태도의 응답자들이 선거가 임박해서야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 참여 여부를 고민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에 육박하는 상충적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결정에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표 6〉 상충적 유권자의 투표행태

	투표여부		투표할 후보/정당 결정 시기			
			후보(지역구)		정당(비례)	
	투표	기권	1개월 전	투표 당일	1개월 전	투표 당일
상충적	78.7 (185)	21.3 (50)	30.3 (56)	23.8 (44)	27.4 (51)	23.8 (44)
일방적	93.2 (912)	6.8 (67)	53.4 (487)	9.5 (87)	43.7 (399)	11.3 (103)
전 체	88.3 (1350)	11.7 (179)	44.0 (594)	13.9 (188)	37.1 (502)	15.5 (209)

수치는 각 항목의 비율, 괄호 안은 사례 수.

¹³ 지역구 후보와 비례정당의 결정 시기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의 통계검증 결과는 각각 $\chi^2 = 144.015(p < .01)$, $\chi^2 = 98.851(p < .01)$ 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투표에 참여한 상층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표 7>의 결과는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와 일방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지역구선거와 정당투표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역구선거에서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보다는 제3정당의 후보들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들의 제3정당 후보 선택비율은 30퍼센트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에 비해서는 2배, 일방적 태도의 유권자들보다는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정당투표에 있어서도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다른 집단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양분된 일방적 태도의 응답자들과는 달리 제3정당에 집중되었으며, 제3정당 중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지정당을 정리한 앞의 <표 4>의 결과에서 상층적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제3정당 지지자들과 무당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구성이 제3정당의 선택 비율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 태도의 응답자들의 30퍼센트 가까운 이들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데 반해, 상층적 태도의 응답자 중 높은 비율이 조국혁신당이 아닌 제3정당을 선택하였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표 7> 상층적 유권자의 투표 선택

	지역구선거			비례선거			
	더민주	국민의힘	제3정당	더민주	국민의힘	조국혁신	기타
상층적	34.6(64)	36.2(67)	29.2(54)	20.0(37)	26.5(49)	14.6(27)	38.9(72)
일방적	50.7(462)	39.9(364)	9.4(86)	24.6(224)	34.8(317)	27.8(253)	12.8(117)
전 체	45.3(611)	39.4(532)	15.3(207)	23.1(311)	33.5(451)	23.0(310)	20.5(276)
	$\chi^2 = 87.132 (p < .01)$			$\chi^2 = 121.246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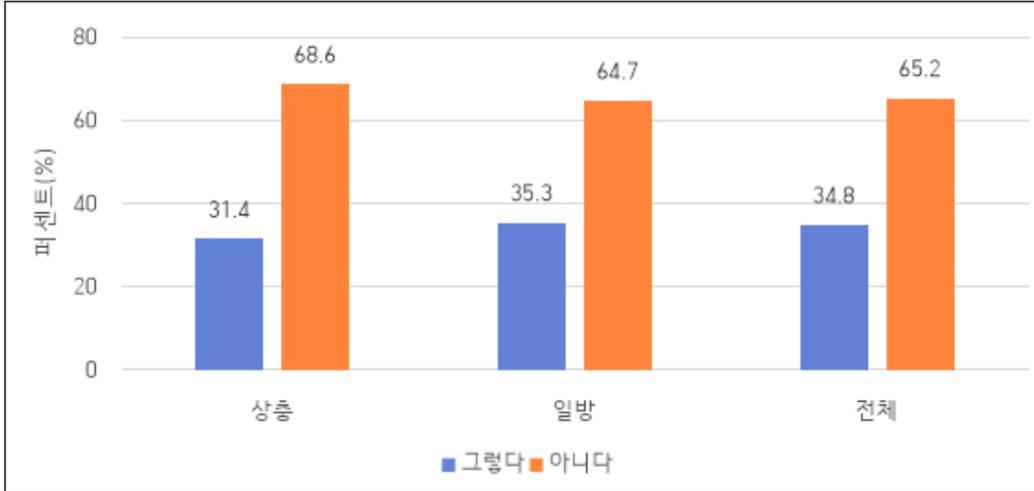
수치는 각 항목의 비율, 괄호 안은 사례 수.

〈그림 3〉의 결과는 이들의 선택이 투표장에서 결정된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림은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에 대한 태도로 구분된 유권자 집단이 지역구선거와 정당투표에서 상이한 선택을 했는지 정리한 결과이다.¹⁴ 상층적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역구선거와 정당투표에서 상이했다면 즉, 분할투표를 했다면 이들이 상층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중 하나에 입장을 정하고 전략적인 선택에 임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층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지역구선거와 정당투표에서 일관된 선택을 보였으며, 그 비율은 일방적 유권자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층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의 68.6퍼센트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의 선택이 일치하였고 이는 일방적 태도를 가진 이들의 그것(64.7%)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대 정당과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층적 유권자들을 지역구와 정당투표 모두에서 일치된 선택으로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이번 총선의 주요 구도였던 정권안정론과 정권견제론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지 않고 두 입장 모두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상층적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른 선택의 어려움에도 투표에 참여해서 양대 정당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던 유권자들이었음을 알려준다.

¹⁴ 지역구 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의 정당과 비례선거에서 선택한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 일관투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할투표로 구분하였다. 구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과 국민의미래는 같은 선택으로 간주하였다. 비례선거의 경우 조국혁신당을 기타정당과 구분하여 지역구 선거에서 기타정당을 선택한 이들이 비례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택할 경우 분할투표로 분류되도록 분석하였다.

〈그림 3. 정권견제/안정론과 분할투표 여부〉



그렇다면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모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토대로 투표에 임한 이들로 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상층적 유권자들은 총선에 대한 두 관점 모두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이들로 구성되어 있음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¹⁵ 논리적으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총선의 두 관점 모두에 대한 반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만일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상층성에 따라 이 집단 역시 다른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표 8〉 두 종류의 상층성: 모두 동의 vs. 모두 반대〉

정권견제 /안정론	지역구선거			비례선거			
	더민주	국민의힘	제3정당	더민주	국민의힘	조국혁신	기타
모두 동의	36.5(23)	54.0(34)	9.5(6)	25.0(16)	45.3(29)	12.5(8)	17.2(11)
모두 반대	33.6(41)	27.0(33)	39.3(48)	17.4(21)	16.5(20)	15.7(19)	50.4(61)
	$\chi^2 = 21.071 (p < .01)$			$\chi^2 = 26.484 (p < .01)$			

수치는 각 항목의 비율, 괄호 안은 사례 수.

¹⁵ 전체 235명인 상층적 유권자들은 선거 구도 모두에 반대하는 154명, 모두 찬성하는 81명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상층적 유권자들의 66%에 달한다.

〈표 8〉의 결과는 실제로 그러한 논리적인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총선의 두 가지 구도에 모두 동의하는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일방적 유권자와 전체 유권자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모두 반대하는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지역구선거에서는 제3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정당투표에서는 기타정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이 글에서 검토한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인식과 행태가 선거의 두 관점 모두에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5. 투표선택에 관한 통계분석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한 태도가 정파적 양극화의 영향 속에서도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유권자 전체 집단에서 발견되는 속성이며, 이들은 대통령과 양대 정당 등 정치행위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방적 태도의 유권자들에 비해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투표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기권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고, 기존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3의 후보와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만 다른 변수들의 통제 없이 수행된 이원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투표선택에 관한 통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이원분석의 결과가 다원분석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통계모형 분석은 이번 총선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두 경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투표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지역구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제3정당의 후보, 그리고 기권 등 네 가지 선택으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더불어민주당연합,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기타정당, 그리고 기권이라는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종속변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방법으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시행하였다.¹⁶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성별(여성), 연령대, 교육수준, 정치지식수준, 정치관심, 대통령 국정평가, 지지정당, 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¹⁷ 언급했듯이 통계분석은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지역구투표에 관한 <표 9>의 결과를 보자. 결과의 해석에 앞서 다항로짓분석의 특성상 각 계수는 기준범주와 비교해서 해당 범주를 선택할 통계적 확률을 의미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열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대비 국민의힘 선택에 있어서 각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국민의힘 지지자일수록 지역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표 9>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지역구투표)

	국민의힘	제3정당	기권
성별(여성)	-.061 (.227)	-.222 (.200)	-.367 (.211)
연령대	-.019 (.073)	-.059 (.066)	-.188 (.072)**

¹⁶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는 기준범주와 비교하여 각각의 선택을 택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기준범주는 지역구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연합이다.

¹⁷ 각 독립변수의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범주로 하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고, 연령대는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의 6점 척도로, 정치지식수준은 4개의 정치지식문항에 대한 정답의 개수(0~4점)로, 정치관심은 전혀 관심이 없다(1), 별로 관심이 없다(2), 다소 관심이 있다(3), 상당히 관심이 있다(4), 매우 관심이 있다(5)의 5점 척도로, 대통령 국정평가는 11점 척도(0(매우 못한다)~10(매우 잘한다))로, 지지정당은 무당파를 기준범주로 하는 4개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 태도, 상충적 태도, 일방적 태도라는 이원분석의 구분을 따르되 종속변수의 내용을 감안하여 견제론과 안정론에 따라 준일방적 태도를 일방적 태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변수는 정권견제론에 대한 “일방적/준일방적 태도”를 기준범주로 하는 3개의 더미변수로 구분된다.

교육수준	-.060 (.100)	.070 (.093)	-.084 (.098)
정치지식수준	.118 (.109)	-.161 (.097)	-.307 (.103)**
정치관심	-.332 (.495)	-.437 (.438)	-1.580 (.480)**
대통령 국정평가	.192 (.052)**	.072 (.051)	.169 (.049)**
<u>지지정당</u>			
더민주	-2.429 (.376)**	-2.385 (.299)**	-1.526 (.287)**
국민의힘	2.327 (.383)**	-.325 (.431)	.614 (.409)
조국혁신당	-2.289 (.772)**	-.355 (.322)	-.722 (.420)
기타정당	.147 (.361)	.680 (.301)*	.059 (.362)
<u>정권견제/안정</u>			
중립	1.627 (.435)**	.964 (.411)*	.436 (.435)
상충	1.355 (.307)**	.862 (.252)**	1.055 (.264)**
일방안정	2.750 (.385)**	1.674 (.389)**	1.838 (.381)**
상수	-1.513 (.733)*	-.163 (.657)	1.469 (.683)*
Cox & Snell R ²	.651		
사례 수	1528		

수치는 다항로짓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5$, ** $p < .01$

다음으로 이 글의 초점인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에 대한 태도변수들의 결과를 보자. 분석결과는 태도의 세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파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이 변수들이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권견제론에 일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에 비해 중립적이거나 상충적인 태도의 응답자들, 그리고 안정론에 일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비 제3정당 후보 선택을 보여주는 두 번째 열의 내용에서 관찰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기타정당 지지, 그리고 태도에 관한 세 변수들이었는데, 정당 지지의 변수들의 영향은 기준범주와 선택범주의 차이로 쉽사리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중립적, 상충적, 그리고 일방안정 태도의 응답자들이 일방견제론의 이들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제3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태도변수의 영향력이 나타난 이유는 상이한데, 일방안정 태도의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을, 상충적 태도의 응답자들은 기성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태도변수들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비 기권의 선택을 분석한 마지막 열의 경우에서도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이원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의 지역구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보다는 제3정당의 후보를, 그리고 기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통계분석에서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정당투표)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기타정당	기권
성별(여성)	-.690 (.260)**	-1.022 (.201)**	-.802 (.227)**	-.914 (.234)**
연령대	.179 (.084)*	.492 (.068)**	.220 (.075)**	.037 (.080)
교육수준	-.001 (.113)	.034 (.086)	.154 (.103)	-.015 (.107)
정치지식수준	.279 (.124)	.046 (.096)	.025 (.109)	-.212 (.612)
정치관심	-.144 (.569)	-.530 (.450)	-.891 (.498)	-1.781 (.528)**
대통령 국정평가	.178 (.058)**	-.111 (.056)*	.107 (.053)*	.151 (.053)**
<u>지지정당</u>				
더민주	-2.903 (.455)**	-.708 (.332)*	-2.862 (.332)**	-1.888 (.326)**

국민의힘	1.933 (.469)**	-.424 (.627)	.087 (.457)	.191 (.476)
조국혁신당	-†	2.693 (.558)**	-1.564 (.882)	.863 (.625)
기타정당	-.918 (.534)	-1.059 (.524)*	.822 (.385)*	-.013 (.439)
<u>정권견제/안정</u>				
중립	1.201 (.535)*	-.083 (.579)	.886 (.456)	.248 (.486)
상충	1.309 (.382)**	-.090 (.319)	.767 (.295)**	.981 (.301)**
일방안정	2.693 (.467)**	-.412 (.641)	1.323 (.434)**	1.591 (.326)**
상수	-2.032 (.849)*	-1.099 (.697)	-.458 (.738)	1.401 (.756)
Cox & Snell R ²	.725			
사례 수	1528			

수치는 다항로지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5$, ** $p < .01$.

†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한 사례가 없는 까닭에 계수가 산출되지 않았음.

정당투표의 결과를 정리한 <표 10>은 비례대표선거에서의 결과가 몇 가지 상이점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패턴에서 지역구선거에서 확인된 바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지역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인구사회학전 변수에서 성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선택 범주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연령대의 통계적 유의미성도 확인되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미래를, 조국혁신당을, 그리고 기타정당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짐으로써 정당투표에서 고연령층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확인되었다.

대통령 국정운영과 정당지지, 그리고 정권견제/안정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변수들의 패턴은 지역구선거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미래, 기타정당, 그리고 기권을 선택할 확률을 높였다. 정당지지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모든 선택 범주의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지지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국민의미래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조국혁신당 선택확률이 높았다. 이는 당파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태도변수 역시 앞의 지역구선거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첫 번째 열의 결과는 정권견제론에 대해 일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응답자들에 비해, 중립적, 상충적, 일방안정론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응답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국민의미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조국혁신당 범주의 선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반해, 기타정당 범주의 선택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충적 태도의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기타정당을 선택하거나 기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이원분석을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다.

6. 나오며

이 글은 이번 총선의 결과를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이라는 두 구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정파적 양극화의 영향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져 중간평가의 성격을 다분히 가진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과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두 관점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선거구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이들은 유권자 전체의 1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당파성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에게서도 그 비율이 10퍼센트에 달해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도 상충적 태도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평가와 투표행태에 있어서도 일방적 태도의 유권자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보였는 바, 지역구선거에서는 제3정당의 후보를, 정당투표에서는 양대 정당과 조국혁신당이 아닌 기타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주류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이 글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들의 상충성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이였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정치적 선택에의 어려움 속에서도 실제 투표에 참여해서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의 정당과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더욱이 정파적 양극화의 심화되고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차별적인 인식과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글의 분석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설명하는 변수로 정치행위자 그리고 선거구도에 대한 상층적 태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상층적 태도는 정당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요인으로 행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주류 정당과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고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이번 총선의 경우 이들은 지역구에서 제3정당의 후보를, 정당투표에서 기타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이는 이들은 불만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유권자들임을 의미하며, 거대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우리나라의 선거환경 속에서도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들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찾는 정치적 선택지는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의 선거환경에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 가능해진다면 이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보여준 상층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정치행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규범적인 함의를 가진다. 규범적으로 민주주의는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시민을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정치행위자들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의 분석결과에 기반하면 양당제의 고착으로 선거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번 선거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향후 이들의 정치적인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이들이 계속 선거의 장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출을 지속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일 표출한 정치적 불만이 해소되지 않아 이들이 선거의 장을 떠난다면 우리나라 선거의 역동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참고문헌

- Alvarez, Michael and John Brehm. 1997. "Are Americans Ambivalent towards Racial Poli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345-74.
- Basinger, Scott and Howard Lavine. 2005. "Ambivalence, Information, and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9: 169-84.
- Berelson, Bernard, Paul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cioppo, John, Wendy Gardener, and Gary Berntson. 1997. "Beyond Bipolar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s: The Case of Attitudes and Evaluative Spa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 3-25.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s*. New York: Wiley.
- Converse, Philip. 1976. *The Dynamics of Party Support*. London: Sage.
- Festinger, Leon D.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Jennifer. 1981. *What's Fair? American Beliefs about Distributive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Jennifer. 1993. "Disjunction and Ambivalence in Citizens' Political Outlooks." George E. Markus and Russell L. Hanson (eds.) *Reconsidering the Democratic Public*.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Jonas, Klaus, Michael Diehl, and Philip Bromer. 1997. "Effects of Attitudinal Ambivalence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Attitude-Intention Consistenc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190-210.
- Lavine, Howard. 2001.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Ambivalence toward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915-29.
- Lewis-Beck, Michael S., William Jacoby, Helmut Norpoth, and Herbert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io, Gregory, David Bell, and Victoria Esses. 1996. "Ambivalence and Persuasion: The Processing of Messages about Immigrant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513-36.
- Yoo, Sung-jin. 2010. "Two Types of Neutrality: Ambivalence, Indiffere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tics*. 72(1).

- **저자:** 유성진_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김선희_EAI 선임연구원.
- 문의: 02-2277-1683 (ext. 209), shkim@eai.or.kr

본 워킹페이퍼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5월 14일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중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